

Online Series

2020. 03. 24. | CO 20-04

코로나 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

조 한 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19 사태를 남북 공동의 인간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보건의료 협력을 활성화해 남북 보건안보공동체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시급한 대북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가칭 '남북보건의료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접촉창구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남북 공유하천, 산림 및 생태·환경, 그리고 접경지역 등 관련 협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생태·환경, 바이러스 등 초국경협력을 다루는 국제기구를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 19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 위기

코로나 19 사태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안보위기의 한 유형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앞에 인류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며, 각 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 19의 치료방법은 아직 요원하며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 앞에서 현대문명을 자부하던 인류는 전대미문의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코로나 19 사태가 보건의로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으며, 그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국가의 국제공항과 항만은 운행을 멈춘 선박과 항공기들로 넘쳐나고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생산과 유통에 애를 먹고 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조차 훈련을 중단하는 현실이다.

오랫동안 전쟁과 무력충돌 등 전통적 안보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4년 제시한 인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즉, 인간안보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인간안보는 군사분야를 넘어 인권, 사회안정, 민주주의, 환경, 보건의로 등 안보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코로나 19 사태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인간안보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초국경협력의 중요성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한 말로,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노출되어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 말을 현재에 적용하면 “코로나 19는 민주적이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에게 바이러스에는 인종과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 따라서 인류공동의 위협인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초국경협력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코로나 19의 위협에 직면해 각국이 앞 다투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 지고 있다. 정작 인류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포용적 자세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는 일이다. 우리는 빗장을 걸어 잠그기보다는 의료역량과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방역과 치료에 나섰다. 코로나 19 확산 현실의 공개를 꺼리는 일부국가와 달리 우리는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세계는 이제 한국의 적극적인 방역노력과 의료체계를 재평가 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초기 한국을 떠났던 프로 스포츠계의 외국인 선수들이 오히려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입을 방지해야 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나라의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세계경제는 글로벌가치사슬(GVC)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는 곧 바로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서 경험한 바 이며, 결국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제협력이 해결의 열쇠로 작용했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한다.

코로나 19 사태는 인류공동의 위협 제거를 위해서는 배타적 고립주의가 아니라 초국경협력과 지구촌 차원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한국인의 입국 금지를 서둘렀던 많은 국가들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

아쉬운 점은 코로나 19의 위기 앞에 정작 시급한 남북협력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기공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도에 마저 온전하게 꾸러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비판”한 것처럼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는 열악하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보건의료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5개 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2018년간 북한 인구의 47.8%인 1,220만 명이 영양결핍을 겪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최근 공개한 3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금년 북한의 쌀 생산량은 1994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심각한 기근으로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양문제는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로 현실화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9 결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 사망자만 연 2만여 명에 달한다.

보건의료 위기는 한반도의 북쪽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의 사체가 포천, 연천, 철원 등 북한과 인접한 남측 접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ASF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조류독감(AD)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남한의 다른 곳과 달리 유독 남측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병하는 것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소나무에 치명적인 솔잎혹파리병은 군사분계선(MDL)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을 연계하는 하천도 수인성 전염병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넓지 않은 영토에 인구가 밀집한 한반도에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 북한의 보건의료 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 통일의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보건의료 비용의 발생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인구통합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문제는 남북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절실하다.

남북 보건안보공동체 형성 방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문제를 남북 공동의 인간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를 포함해 당면한 분야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남북 보건안보공동체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는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이념과 체제, 그리고 정치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와 미국은 대북 의료지원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밝힌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 19와 관련해 협력의사를 표명했다. 남북 공동의 보건안보에 대한 재인식과 아울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 19 방역 관련 대북 의료지원이다. 여러 정황상 북한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다수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했지만 당국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를 시작한 것은 금년 1월 말부터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등 국내의 수급도 여의치 않은 분야를 제외하고 진단키트 등 여유가 있는 의료용품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국민정서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는 사실을 곱씹어 봐야 한다.

코로나 19 퇴치를 위한 남북 공동의 협력체를 형성하고 이를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는 ASF, AI, 말라리아, 솔잎혹파리병 등 다양하며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결핵, 간염 등 북한 내 전염성 질환이 만연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며 상시적인 대북의료지원 체제의 구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남북보건의료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접촉창구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남북 공유하천, 산림 및 생태·환경, 그리고 접경지역 등 관련 협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현 정부의 구상인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생태·환경, 바이러스 등 초국경협력을 다루는 국제기구를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보건의료, 산림 및 환경, 그리고 접경지역 협력은 모두 비정치적 성격으로 인간안보의 구현에 기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대북제재와 상충 가능성도 크지 않다.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남북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보건안보공동체의 구현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보건안보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사회문화 및 경제 등 남북 교류협력 전반을 견인함은 물론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